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전국장애인위원회 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사무국(서미화 의원실) 연락처
- (유선전화) 02-784-6441 (~3)
- (이메일) m2hwaseo@gmail.com

2025년 3월 24일(월)

배포 즉시 보도가능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4일(월)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대변인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부위원장, 운영위원,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고 지연의 부당함을 밝혔다.
- 서미화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반헌법·반민주·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시시키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 책동을 벌인” 윤석열을 비판하며, 선고 지연으로 심화되는 경제적·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을 멈추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선고를 요구했다.
-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3 내란으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말뿐인 약자복지를 외치며 정권 자화자찬”을 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 또한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거짓말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법리에 입각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을 거치며 드러난 실체적 사실과 온 국민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반헌법적 내란 증거를 토대로 “우리사회를 뒤덮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붙임1]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모두발언문

[붙임3]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윤석열 파면 선고 촉구 기자회견문

담당자 : 조현수 보좌관	연락처 : 02-784-6441
---------------	-------------------

[붙임1] 기자회견 현장사진



[붙임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모두발언문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60만 장애인동지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112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벌써 101일째입니다.

민주시민분들과 우리 장애동지들까지 나서서 온몸으로 비상계엄에 맞서 싸웠고 생업과 일상까지 포기하면서 광장에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급기야 오늘 내란동조자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정녕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헌법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반헌법 반민주 반인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정지시키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책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통한 내란 행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10조 생명권,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등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장애인 등 소수자는 전쟁, 재난, 정치적 불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이번 계엄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떤 계엄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거 대상에 전장연이 있질 않았습니까? 계엄을 시민들과 국회가 힘을 합해 해제시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오늘같이 현재에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싸웠고 지금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너무나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 동지들도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뿐만 아니라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소추의 결을, 지금은 거리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후퇴하고 경제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룬 모범국가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라는 치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의 여파 등으로 OECD마저 올해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절대 안 해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을 통과시켜 인권위원회에 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로 인권위를 사정없이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장애시민과 온 국민들의 절규에 이제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만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버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계획은 명백한 반헌법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입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론분열과 경제침체 국격 저하 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조속히 지정하라.

둘째, 헌법재판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 공직자임을 명심하라.

셋째,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라!
윤석열 비상계엄의 본질은 ‘권력영속’ 을 위한 친위쿠데타다”**

현재의 판결이 자꾸 미뤄지면서 사회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스템이 무너져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이상 거짓말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사태의 본질과 법리에 입각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10여 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 심화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특히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정혼란은 점입가경입니다. 뜬금없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 급등을 초래해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 전투기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오폭사고를 내는 지경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도 정부는 두 달 후에서야 이를 알 정도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혼란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차례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덕수총리 등 여러 증언과 증거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제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온 국민은 두 눈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완전무장한 군대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생중계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대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갈수록 고통이 커지고 있으나 말뿐인 약자복지를 외치며 정권 자화자찬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명태군 수사를 통해 불법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이를 뭉개기 위해 서둘러 일으킨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우리사회를 뒤덮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계엄과 선동을 통해 장기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내란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깃들여진 우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